

기업세제 개선방안

-세율 및 세액공제를 중심으로-

2023년 9월 12일

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

황상현

들어가며...

- 한국 경제는 1970-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연간 10% 이상 성장하였으나,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%p 하락하여 2030년대부터 0%대로 성장할 전망
- 현재 세계 경제는 불황에서 차츰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섰지만, 한국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지 못하고 저성장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음
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'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(WEO)'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.2%p 높여 3.0%로 수정 발표
 - 영국 0.7%p, 미국 0.2%p, 일본 0.1%p, 유로존 0.1%p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
 -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.1%p 하향 조정되어 1.4%로 수정 발표

- 최근 고물가·고금리, 글로벌 경기침체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
- 또한,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체계 재편 및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
-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,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
- 이와 같은 세계 및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한국의 투자·고용·성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

법인세율

- 2017년 말, 지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→25%로 3%p 인상
- 지난해 9월 1일, 현 정부는 최고세율을 25%→22%로 3%p 인하하고 중소·중견기업에 특례세율을 도입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
- 지난해 12월 23일,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%p씩 인하하는 것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 통과

법인세율 현황

과세표준	2018~2022년	2023년 세제개편안(정부안)	2023년
2억원 이하	10%	10%(중소·중견기업), 20%	9%
2~5억원	20%		19%
5~200억원		20%	
200~3000억원	22%	22%	21%
3000억원 초과	25%		24%

-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세인 '법인세 세율 인하'에 역행

법인세 최고세율(지방세 포함) 추이

	2011년	2014년	2018년	2021년
한국	24.20%	24.20%	27.50%	27.50%
OECD 평균	25.30%	25.20%	24.00%	22.90%

자료 : OECD statistics(<https://stats.oecd.org>)

-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4단계 누진체계가 된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
-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,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세율체계를 적용

- 법인세 최고세율이 투자·고용과 세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(황상현, 2022)
 - 분석대상: 외감법인
 - 분석연도: 1998~2021년
 - 분석모형: 패널 고정효과모형
- (투자 효과) 법인세 최고세율이 1%p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5.66%p 감소
 -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1%p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가 6.61%p 감소
 - 중소기업은 총자산대비 투자가 3.32%p 감소

- (고용 효과) 법인세 최고세율이 1%p 인상되면 종업원수는 3.53% 감소
 - 대기업을 법인세 최고세율이 1%p 인상되면 종업원수가 2.74% 감소
 - 중소기업은 종업원수가 4.04% 감소
 -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
- (세수 효과) 법인세 최고세율이 1%p 인상되면 법인세비용은 3.16% 감소
 - 대기업을 법인세 최고세율이 1%p 인상되면 법인세비용이 8.08% 감소
 - 중소기업은 법인세비용이 1.65% 감소
 -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생산을 저하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짐

법인세 최고세율 1%p 상승 시 투자, 고용 및 세수 효과

표본	투자/총자산(%p)	종업원수(%)	법인세(%)
전체	-5.66	-3.53	-3.16
대기업	-6.61	-2.74	-8.08
중소기업	-3.32	-4.04	-1.65

2021년 총자산, 종업원수, 법인세 현황(총계)

(단위: 십억원, 천명)

표본	총자산	종업원수	법인세
전체	4,842,678	4,508	59,328
대기업	3,396,537	2,776	49,112
중소기업	1,156,680	1,661	11,911

법인세 최고세율 1%p 상승 시 투자감소액, 고용감소수 및 세수감소액

(단위: 십억원, 천명)

표본	투자	종업원수	법인세
전체	-274,241	-159	-1,875
대기업	-224,511	-76	-3,968
중소기업	-38,390	-67	-197

- 국내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(황상현·이승래, 2015)
 - 2002-2011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업 내 상장기업 대상
 - 평균실효세율 1%p 증가로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1.28%p, 한계실효세율 1%p 증가로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4.98%p 증가
 -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 증가로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고용은 간접적으로 감소 효과를 가짐

-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필요
 -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내 자본유출을 막고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의 법인세율을 인하
 -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·고용 확대 → 경제성장 →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

투자세액공제

- 2023년 1월 3일,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의 세제 지원 강화방안 추진
 - 불안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,
- 이러한 세제지원 방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4월 1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공포·시행

-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
 - 대·중견기업: 8%→15%, 중소기업 16%→25%
-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(2023년 1년간 한시)
 -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%p씩 상향하여,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2% 적용
 - 신성장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%, 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18%로 상향 조정
-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%로 2023년 한시 상향(2023년 경정)

투자세액공제율(%) 현황

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황

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

③ '23년 경정

구 분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시설	1 → 3	5 → 7	10 → 12	3 → 10
신성장사업화시설	3 → 6	6 → 10	12 → 18	
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	8 → 15	8 → 15	16 → 25	4 → 10

※ 총 투자세액공제액 = (투자액 × 당기분 공제율) + (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× 증가분 공제율)

-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래 시행과 중지를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이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변화될 때까지 투자촉진 세제로 활용
 -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경기불황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투자 동기를 제고하고 경기조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나,
 - 그 동안에 경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본 제도가 가져야 할 경기조절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로써 사라지게 되었음
- 그러나 실증분석에서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와 별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불황 시 안정화 기능이 존재
 -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했던 정책변화를 활용한 이철인(2020)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,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자산을 10%이상 증대시키는 정도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났음

-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처럼,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·운영될 적기라고 할 수 있음
 -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2년 만에 재도입되었으니,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기대

- 투자세액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(황상현 2023)
 - 분석대상: 비금융 외감법인
 - 분석연도: 2009~2021년
 - 분석모형: 패널 고정효과모형
- 시설별 투자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는 투자세액공제율 1%p 상승 시 총자산대비 투자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해 0.179%p, 생산성향상시설 0.277%p, 안전시설 등 0.194%p, 에너지절약시설 0.179%p, 환경보전시설 0.168%p,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해서 0.168%p 각각 증가
 -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%p 상승에 따른 투자 증가 폭이 가장 크고 환경보전시설 또는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%p 상승에 따른 투자 증가 폭이 가장 작음

투자세액공제율 1%p 상승 시 투자 효과

시설	투자/총자산(%p)
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	0.179
생산성향상시설	0.277
안전시설 등	0.194
에너지절약시설	0.179
환경보전시설	0.168
신성장사업확시설	0.168

2021년 총자산 현황(총계)

(단위: 십억원)

	총자산
전체	4,842,678

투자세액공제율 1%p 상승 시 투자증가액

(단위: 십억원)

시설	투자
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	8,668
생산성향상시설	13,414
안전시설 등	9,395
에너지절약시설	8,668
환경보전시설	8,136
신성장사업확시설	8,136

-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
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필요
 - 특히,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위축에 따라 우리 경제도 위기가 심
해질 것으로 전망
 -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투자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
세제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잠
재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

R&D 세액공제

- 조특법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:
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R&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공제율은 기술 분야별,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
 - 현재 일반 R&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0~2%('당해연도 R&D 비용/수입금액 × 1/2'을 공제율로 최대 2% 한도), 중견기업 8%, 중소기업 25%로 차등 적용
 - 다만, 특정 국가전략기술(6개 분야, 54개 기술) 및 신성장·원천기술(13개 분야 262개 기술) R&D에 대해서는 그 밖의 일반 R&D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

R&D 세액공제율 현황

	일반	국가전략기술	신성장·원천기술
대기업	0~2%	30~40%	20~30% (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~40%)
중견기업	8%		
중소기업	25%	40~50%	30~40%

- 한편,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'2023년 세법개정안'을 확정·발표
 -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이 추가되고 이와 함께 신성장·원천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, 핵심광물 정·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이 추가되어 R&D 세액공제가 다소 확대된 것은 고무적
 -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에 해당되지 않은 그 밖의 일반 R&D 세액공제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음

- 그 동안 세법개정은 R&D 세제지원에서 대기업 대상으로 정비되어 일반 R&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에 대해 2013년 3~6%, 2014년 3~4%, 2015년 2~3%, 2017년 1~3%, 2018년 이후 0~2%로 계속하여 축소
- 일반 R&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(0~2%)이 프랑스(30%), 영국(13%), 미국·일본(최대 10%)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음

- 이처럼 일반 R&D 세액공제율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 - R&D 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
 - 또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R&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
 -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민간 R&D 투자에서 대기업이 60.8%를 차지하고 있음
-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효과를 추정한 실증분석결과([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, 2018](#))
 - 국세청의 신고연도 2007~2017년, 5,000여개 법인 납세 자료를 이용
 -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% 증가에 따라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는 5~10% 증가

- 따라서 지속적인 R&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R&D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한국 기업의 R&D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 우려
- 이에 기업들이 민간 R&D 투자를 주도할 수 있도록 R&D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, 특히 일반 R&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 완화를 향후 세법개정에 기대

마치며... 바람직한 기업세제 개선방안은 ...

- 현재 성장 위기 극복, 법인세부담 완화로
 - 법인세율 인하,
 -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,
 - 일반 R&D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으로 투자·고용 증대
 -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
- 향후 재정수입 안정화, 조세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
 - “낮은 세율, 넓은 세원”의 원칙 하에서 법인세부담 완화로 투자·고용 증대 → 성장 촉진 → 세수 증가

<참고문헌>

- 전경련, "2023년 세법개정 건의," 보도자료, 전국경제인연합회, 2023.03.21.
- 이철인, "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," 국제경제연구, 제26권 제2호, 2020.
- 한국경제연구원, "대한민국, 위대한 리셋: 차기정부의 정책과제," 2021.
-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"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,"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(IX), 2018.
- 황상현·이승래, "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," 연구보고서, 한국경제연구원, 2015.
- 황상현, "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," 연구보고서, 전국경제인연합회, 2022.
- 황상현, "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," 연구보고서, 전국경제인연합회, 2023.
- OECD statistics(<https://stats.oecd.org>).